판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요즘 간첩단 사건 재판은 재판이라고 할수없는지경이다. 청주지역노동계 인사들이 북 공작원과 접선한 뒤 반 (反)국가 활동을 했다는 '자주통일 충 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중위 헌 심판을 제청했고 변호인도 4차례나 교체했다. 법관 기피 신청도 2차례 냈 는데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재항고를 반복해 최종 기각까지 210일이 걸렸다. 기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심 이 진행 중이다. 구속됐던 피고인은 이 미 다 풀려났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 개월인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못 끝내 면 피고인을 풀어주게 돼 있기 때문이 다. 법 절차를 악용한 재판 농락이다.

최근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신종 수법'으로 등장했다. 국민참여재판 신 청 심리 기간은 법관 기피 신청과 달리 구속 기간 산정에도 포함된다. 이를 노 리고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올 들어 일 제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가장 노골적인 사례가 지난 3월 기소 된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 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 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 기피 신청 사유는 "위헌 심판 제청 결

청했다. 불허하자 항고·재항고를 계속 해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했다. 그러 다 지난 8월 가까스로 재판이 열렸는 데 또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을 고발해 재판이 중단됐다. 나중에 재판 이 재개돼도 이들은 며칠 뒤 풀려날 것 이다. 재판 농락은 점점 집요해지는데 법은 무르고 판사들은 무력하다는 생 각을 지울 수 없다.

간첩 사건 피고인들 뒤엔 민변 변호 사 수십 명이 버티고 있다. 이들이 내 세우는 절차도 중요하고 방어권도 보 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보장하는

간첩 사건 피고인들 재판 지연 점점 집요해져 '재판 농락' 수준 제동 장치 있는데 판사들은 방치 권한 행사해 농락 사태 막아야

것과 재판 농락까지 묵인하는 것은 다 른 문제인데 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러면 재판 농락은 무슨 '공식'처럼 굳어질 것이다.

이를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 니다. 통상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최종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다. 하지만 현행법엔 소송 지연 의도가 명 백한 기피 신청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 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 게 돼 있다. 간첩 사건 피고인들의 법관

정을 신속히 안 했다" "보석을 인용해 주지 않았다" 등 대부분 비합리적인 것 이다. 누가 봐도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 한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하지 않고 판 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겨 재판이 지연 되는 것이다. 그 배경엔 괜한 구설에 휘 말리기 싫고, 재판이 지연되면 해당 재 판부로선 선고를 안 해도 되니 좋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한 다. 사실이라면 무책임한 것이다.

다른 재판부에서 기각 결정이라도 빨리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있 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2차 법관 기 피 신청에 대한 최종 기각 결정까지 163일이나 걸렸다. 대법원에서만 84 일을 끌었다. '민중전위' 사건 피고인 들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 에서 최종 기각된 것도 신청 넉 달 만 이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고압적으로 재판하라는 게 아니다. 명백한 재판 지연에 대해선 판사가 정 당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내란 선동 혐 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의 원 사건은 1심 유죄 선고가 5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재판장은 일주일에 네 차 례씩 공판을 진행했고, 변호인이나 검 사가 공판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면 법 조항을 언급하며 강력히 제지했다. 그 런 의지와 자신감이 있어야 지금의 재 판 농락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판사가 허수아비가 돼선 안 된다.

김준의 맛과 섬 [160]

진도군 조도 돌미역

최근비가제법오던날,집앞고깃집 에서 가족 회식을 하고 있었다. 식당 직 원이 고기를 구워 식탁에 올려주고 돌 아간 직후, 8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할 머니가 들어오더니 홀을 한 바퀴 둘러 보고, 아내에게 곧장 다가와 미역이 한 가닥 남았다고 내밀었다.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5만원 이라는 말에 머뭇거리니 쥐포를 내밀었 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자 그 할머니 가 아내에게 3만원만 주라는 것이다. 비 가 와서 돌아다닐 수 없어 팔고 들어가 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진도곽'이라 며 꺼내서 보여줬다. 그 말에 아내 마음 이 움직인 걸까. 길이는 150cm, 폭은 30 cm쯤 될 것 같았다. 크기와 미역 모양새 는다고도 한다. 미역을 채취할 때면 마 는 진도곽으로 보였다. 진도곽은 조도

전남 진도군 조도면은 150여 개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도 본섬 을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 일대의 크고 작은 섬들은 대부분 조도면에 속한다. 그중 논밭이 있고, 어장이 좋은 일부섬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역을 생명줄 삼아 살았다. 특히 독거도, 맹골도, 곽 도의 돌미역이 유명하다. 독거도와 곽 도는 미역 포자가 바위에 붙기 전에 뭍 에 있던 사람들도 섬으로 들어와 미역 바위를 청소하고, 여름철에는 바닷물 이 많이 빠질 때 미역이 햇볕에 노출되 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닷물을 뿌 려준다. 그래서 미역이 자라는 갯바위 를 미역받이라 부르고, 미역 농사를 짓 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공동 노동을 면의 여러 섬에서 생산되는 돌미역이다. 하고, 똑같이 나누었다. 미역 철이 되면



뭍으로 나간 자식들, 시집간 딸들도 아 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모여 한 가닥 두 가닥 정성껏 만들었다. 미역을 팔아야 학교도 보내고, 생필품도 구할 수 있었다. 미역이 곧 돈이고 화폐였다.

조도 미역은 식당에서 만났던 할머 니가 팔던 것처럼 미역 가닥의 폭과 길 이가 예사롭지 않다. 그 미역 20가닥을 한 뭇이라 하는데, 비쌀 때는 70만~80 만원도 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구입 한 미역이 진도곽이라면, 소매를 고려 해 5만원을 불렀던 것이나 3만원에 판 것도 합리적이다. 진도곽은 시간을 두 고 뭉근히 시골을 고듯이 끓여야 한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説

국제사회가 中 압박하면 야만적 탈북자 북송 막을 수 있다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양자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면담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대규모 북송 사태 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가 공 동 대응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한미 협의체가 있었다. 하지만 두 차례 회의가 열린 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라졌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 관행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렇다고 국제법상 난민이자, 헌법상 한국 국민인 탈북자들이 강 제 북송되는 상황에 한국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만 은 없다. 탈북자 북송은 국경을 넘은 외국인을 자국으로 돌려보 내는 일이 아니다. 굶주리고 핍박받다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난민을 지옥으로 되돌려보내는 야만적 행태다.

탈북자 북송을 비롯한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광 범위하고도 효과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즉각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노력을 계속하면 중국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산당 국가이기는 하지만 유엔 상임이사 국에다 세계와 무역해야 하는 처지에서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

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출범은 중국의 야 만적 행태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 길게는 10년째 생사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수많 은 납북자와 국군 포로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모두 한미 북한 인권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인권 문제다. 한 미 일 정상은 지 난8월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에서사상처음으로 '억류자·납 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조'를 공동성명에 명시 했다.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출범은 그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 다. 필요하다면 일본, EU와도 손잡아야 한다.

이번 탈북자 집단 북송 과정에서 정부는 무기력한 대처로 비판받 았다. 충분히 예견된 사태임에도 이를 막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 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한미 협의체 출범 역 시쏟아지는 비판을 잠시 모면하려는 면피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 이 나온다. 첫 회의가 열리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이를 막을 실질적 조치부터 논의해야 한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와도 공조해 나가야 한다. 정부

가 얼마나 절박하게 임하는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의사 부족으로 환자 큰 고통, 국민·의사 윈윈 방안 찾아야

정부가 2025년 대입부터 국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 을 추진하자 의사협회는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일부에서는 과 거처럼 또 의사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의사가 부족해 겪는 국민 불편은 이제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 르렀다. 수명 연장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어났 는데 의사 수는 늘지 않으니 곳곳에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동네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는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하 는 '오픈런' 이 일상이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 타까운 소식까지 끊이지 않는다. 하루가 급한 암 환자들이 치료 를 받으려고 수개월 대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방 의료 공백은 '의료 상경'을 불러와 서울 대형 병원 인근 에는 이른바 '환자촌' 이 형성됐을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이른 바 '빅5' 병원에서 상경 치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만 71만여 명이 다. 암 환자의 경우 지난 5년간 103만여 명이 원정 치료를 받았 다는 통계도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에서 아픈 국민이 자 기가 사는 곳에서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현상과 수치로 볼 때 분명하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학부터 의대 정원을 1000 명 늘리고 순차적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30년 후 OECD 의사 수 평균에 도달하려면 의대 정원을 5500명 늘려야 하고, OECD와의 지금 격차를 유지만 하는 데도 2535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사 부족에 따른 국민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의료 수요와 의사들 주장을 둘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 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의대 증원만큼 중요한 것이 응급의학 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기피 과목에 대한 보상 확대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의료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도 시급하다. 의사들도 국민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인정 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현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좀비기업 4000개인데 '부실기업 정상화법' 그냥 없앤 무대책 국회

불황과 고금리로 기업 부실이 빠르게 늘어나는 속에서 '워크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가 두 차례 아웃(기업 개선 작업)'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의 태만으로 지난 15일 효력을 잃었다. 워크아웃 은 금융 채권자들이 신속한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 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하이닉스 ·현대건설을 비롯한 부실기업 회생에 많은 성과를 냈다. 이 제 도의 근거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후 6차례에 걸친 법 률 제·개정을 통한 연장으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그동안 워크아웃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킨 성공률이 34%에 달하 고 정상화 기간은 3.5년에 불과했다. 법원 회생 절차(법정 관리)의

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에 막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국회가 여야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빚는 바람에 후 속 심사가 재개되지 않은 채 시한이 끝나 이 법이 일몰(日沒)돼 없어지고 말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져 속칭 '좀비 기업' 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15.5%로, 3900개가 넘는다. 외부 차입 없이는 빚 갚기가 어려운 부실 징후 기업은 2021년보다 25곳 늘어나 185곳에 이른다. 올 6 월까지 법원엔 724건의 법인 파산 신청이 접수돼 작년 상반기의 452건보다 60% 급증했다. 불황으로 기업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정쟁만 일삼는 국회 때문에 대책 없이 제도가 폐지됐다. 정치가 역할에

성공률 12%, 정상화 기간 10년에 비해 더 효율적이란 점이 입증됐 다. 수출 기업의 경우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신용장 거래가 중단되 는 반면, 워크이웃은 부작용 없이 상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올해도 10월 법 시한 만료를 앞두고 여야 의 태만한 결과 부실기업 정상화를 돕는 유용한 수단이 사라진 것이 원들이 각각 일몰을 연장하자고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다. 하루빨리 재입법을 통해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국민의힘 3선 이상 의원들에게 권한다… 용퇴나 험지가 살 길이디

자유 본연의 정신으로 재정비돼야 한다. 어떻게? == 과감한 '물갈이 공천' 하라! ==

(2) 2024 공천에서 자유 투쟁에 불타는 인물들이 과감 히 발탁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이 [정체성 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기한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그런 후진들에게 솔선, 자리를 물려주고 험지(險地)에 나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하면, 노 후(老朽)하게만 보이던 국민의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이 확연히 달라지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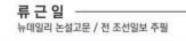
중진·명망 의원들일수록 소위 [수도권 위기론]에 정면으 로 도전할 것을, 호소한다. TK 의원들일수록 자진, 혐지 로 갈 것을, 소망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안일과 나태에 빠져 국민적 감동과 흥분을 자아내지 못했다. 자유 국민은 스타에 목마르다.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장관이 왜 자유인들의 환호를 받 는가? 그들의 용기있고 우수하고 매력 있고 쟁쟁한 자질 에 대한 호응이다.

짜로 먹고 들어가려는 심보론 '꾼'들을 이겨낼 수 없다. 이 재명은 '꾼'이다.

국민의힘은, 따분함과 범용(凡斯)함을 펼쳐버려라! 비범하고 재기 발랄하고 탁월한 인재와 투사들이 나서라!





류근일 칼럼 더보기 ▼ 자유인 장기표의 싸움 사법부 재판의 정치화에 대한 저함

비(非) 좌파 방송, 왜 윤 대통령 '이념 강조' 비판? '주류 <u>끗</u>발' 행세 때문인가

보궐선거 패배 후 윤대통령의

구멍 숭숭 뚫린 선판위 안락사 뒤 제탄생 지켜야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램으로 10월 17일 게재 되었습니다.



왜 김기현 대표를 그냥 두기로 했는지는, 짐작이 간다. ▲ 민주당 ▲ 운동권 ▲ 국민의함에 있는 [이준석 성향] ▲ 윤석열의 [선명한 반(反) 주사파 투쟁]을 버거워하는 국민의힘 안팎의 중간파 등이, 김기현을 때리면서 실은 윤석열을 벼르고 노리기 때문이다.

보선에서 참패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신중

김기현 당 대표는 그대로 놓아두고, 나머지는 다 바꾸는

호소하고 소망한다

지역주의에 기대지 마라

'공짜'론 이재명 같은 '꾼' 못 이긴다

== '신중한 변화' 선택했다, 그러나… ==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라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곁에 김

그렇다면 신중하게나마 국민의힘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 로 바꿔나갈 것인가?

기현이라는 한 겹 살을 두기로 한 까닭을 알 만하다.

== '정체성 혼란' 극복하라! ==

(1)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정당이 란 원칙만은 계속 견지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948년 8월 15일 에 건국한 대한민국의 [출생의 이유]가 그것이다.

이승만 박사 등 [건국 시조]들은 미 군정의 좌우 합작 기 도, 남로당의 통일전선과 폭력혁명을 박차고 대한민국 세 우기로 매진했다.왜?

극좌 전체주의 일당독재에 반대하고 [자유민주 정치 + 시장경제 + 서방 동맹]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 [출생의 이유]에 서서 대한민국 자유 진영은 △ 6.25 남침 격퇴 △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를 차례로 이룩했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그 [출생의 이유]는 희석되고 왜곡 되고 도전받는다. 건국 당시도 창궐했던 [극좌 전체주의 + 기회주의 중간파] 세태 탓이다.

국민의힘도 이 세태에 겁먹고 영합하고 밀렸다. 선명한 자유 이념을, 민생을 챙기지 않는 [국위라 낙인질 한다. 그 렇다면, 대한민국 [민생 성공사]는 누가 이룬 것인가? [좌 파+중간패가?

지역주의에 기대 아무런 기량도 발휘하지 못하는 채 공

뉴데일리 칼럼 54 프린트 버전 시리즈

한 변화]를 선택했다.

뜻이라 한다.

선택, 무엇이어야